

6·3 지선 앞두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잇따라

후보자 발걸음 분주... 지역정치 새바람

“전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주민들과 첫 인사

후보자 응원 지지자들 발길 분주... 분위기 UP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의 경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전북 지역 곳곳에서는 출마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잇따라 열리며 지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전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주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고 현직에는 이들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발길이 분주히 이어지며 선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남원시청 맞은편 향교동 지리산 새마을금고 2층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응원을 보냈으며 김 예비후보는 “남원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방 같은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김동구 도의원도 군산시 조촌동 두레빌딩 1층에 마련된 선거사무

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행사장에는 지역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힘을 보탤고 김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군산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동화 도의원 역시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66번지에 위치한 건물 5층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그는 “전주의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김종담 전 도의원도 같은 날 덕진구 송천로 30번지 1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장연국 도의원과 최명철 전주시 의원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3-1번지 동국빌딩 3층에 공동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나란히 개소식을 갖는 등 협력과 연대의 모습을 보였다.

두 후보는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주말, 전북 지역 곳곳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를 잇따라 개소하고 있다. 사진은 김종담 전 전북도의회이 덕진구 송천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엄지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공동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처럼 지난 주말 동안 이어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시민과 후보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진심 어린 다짐과 주민들의 기대가 어우러

지며, 지역 곳곳에서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조용히 솟아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각자의 비전과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만호 기자

오늘 2026 지적 통계 공표

국토부, 국토정책 수립·행정업무 활용에 '기초'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사진)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6년 지적(地籍) 통계를 3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지적통계가 작성된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 토지 면적은 토지개발 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등 신규등록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4.3배에 달하는 크기로, 화성시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공유수면 매립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 사업으로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8,428.2㎢(18.3%), 강원 1만1,681.2㎢(16.8%), 전남 1만2,364.3㎢(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0.9㎢(0.5%), 대전 539.8㎢(0.5%) 순이다.

지난 10년간 국토의 면적 증감 추이

를 살펴본 결과 국토면적의 약 81.8%를 차지하는 산림·농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 1,538.6㎢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 학교용지) 면적 488.7㎢(15%),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면적은 262.9㎢(25%),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면적은 402.1㎢(12%),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면적은 240.9㎢(42%) 각각 증가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거·산업용지와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산림·농지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산림(722.5㎢)보다 농지(816.2㎢)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 3,196.1㎢, 경상북도 2,990.0㎢, 충청남도 2,441.7㎢ 순으로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농지의 88%(16,196.4㎢)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통계연보는 통계도표, 총괄, 시·도, 부록의 형태로 제작되어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개 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형태(PDF)로 각종 통계 포털에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성호철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수요기관에 적기에 제공하고 다양한 국토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도민 생명 재산 지키는 가장 큰 힘”

김 지사, 장수 소방교육훈련센터 등 방문 현장 인력 격려·봄철 재난대응태세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장수군에 위치한 전북 소방교육훈련센터와 장수군 산불대응센터를 찾아 현장 인력을 직접 격려하고 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방공무원과 산불진화 인력 모두의 대응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소방교육훈련센터에 도착해 교육 현장을 순회했다. 다목적 강당에서 신규 임용 소방관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건넸고 지휘역량강화센터에서는 재난 상황별 지휘 훈련에 임하는 대원들을 응원했다. 이어 훈련장에서 전문 로프 구조훈련을 참관하고, 실화재 훈련장에서는 실제 불을 활용한 훈련 시설을 직접 시찰하며 시연을 지켜봤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힘든 훈련 과정을 묵묵히 소화하며 역량을 키우는 여러분 덕분에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력을 더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 산불대응센터로 이동해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산립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 진화 인력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진화



30일 장수군에 위치한 전북 소방교육훈련센터와 장수군 산불대응센터를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현장 관계자로부터 봄철 재난대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장비와 무인 감시카메라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대응 체계를 확인했고, 기구변화로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인력의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소방 교육훈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립재난

대응단의 활동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봄철 산불 대응 체계를 보다 정비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산립재난대응단과 진화 인력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모든 수의계약, 현업부서 전결로 처리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공직사회 혁신 공약 제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투명하고 유능한 스마트 행정”을 기치로 공직사회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중심인 공무원이 일하기 좋고 함께 행복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권한 위임과 업무 혁신 복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시민 불편 권한 위임 방안을 내놓으며, 실무 중심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줄이는 일 버리기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겠다는 구상도 강조했다.

공직사회 내 갑질과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 예비후보는 전횡과 갑질이 발생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조직 내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후배 공무원이 산배를 지도하는 ‘리버스 멘토링’=역 멘토링을 간부급 필수 교육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복지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낮은 연차의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거 대출을 지원하고 복지 포인트를 확대 지급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시민 불편 권한 위임 방안을 내놓으며, 실무 중심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줄이는 일 버리기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겠다는 구상도 강조했다.

공직사회 내 갑질과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경선 30분 전 감점 통보... 절차적 정당성 훼손” | 한병락 입실군수 예비후보, 민주당 경선 절차에 “유감”

입실군수 출마를 선언한 한병락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입실군수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를 설명하며 도당의 경선 절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 예비후보는 3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7일 민주당 전북도당 입실군수 경선 서류 접수 마감 30분을 앞두고 도당 관계자로부터 감점 25% 적용 가능성을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접수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의 과정을 설명하고 군민과 당원들의 뜻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한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미 도당으로부터 감점이 없다는 문자 안내를 받았으나, 접수 마감 직전 “과거 경선과 관련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천 불복자로 간주해 25% 감점을 적



한병락 더불어민주당 입실군수 예비후보가 3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 절차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재심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마감 30분 전에 감점 가능성을 통보하고 접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은 절차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는 집권 여당의 경선에 대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

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예비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하며 “사전 통보 없이 결과 발표 현장에서 감점을 받고 상대 후보는 가산점을 받아 경선에서 자신이 더 많은 득표를 받아 승리하고도 가점과 감점 결과를 합산하여 민주당 입실군수 후보자가 되지 못한 이른 경

합이 있다”며 “그럼에도 당을 떠나지 않고 14년간 묵묵히 당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에서의 경선은 군민의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민주당 전북도당에 입실군수 경선 서류 접수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거취에 대해 “군민과 당원들의 뜻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입실군민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는 4월 1일까지 입실군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당원으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만호 기자

AI·금융·문화인재 육성... '패스' 도입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청소년 이동권 보장 등 정책 내걸어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의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육성 정책과 청소년 이동권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정책을 제시했다. 국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가 피지컬 AI와 제2 금융중심지, K컬처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뿐 아니라 이를 이룰 창의적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로봇 실습 △경제·금융 기초 교육 △버추얼 콘텐츠 제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만호 기자

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래 인재 캠프를 운영해 실무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국 예비후보는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패스'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패스'는 전주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서관과 박물관 공연장 등 다양한 교육·문화시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겠다는 취지다.

국 예비후보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은 곧 교육과 경험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며 “'패스' 운영 정책은 모든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며 “AI·금융·문화 및 전문분야 창의 교육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방학 기간에는 지자